

전북경제 삐끗... “위기를 기회로”

군산조선소가동중단 넥솔론 파산위기 등 극복위해 공공기관 모여 도내 경제기관장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전북도는 도내 경제관련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각 기관의 주요 시책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간인 소셜캠퍼스온전북(효자동 위치)에서 10월에 취임한 최정호 정무부지사 주재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도로공

사 전북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등 도내 경제 유관 기관장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한 안내 및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2017.11.09.)한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 군산 조선소 가동중단, 넥솔론 파산 위기, 한국 GM철수설 등 전북경제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마련한 위기기업 관리·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각 기관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

은 “국제여객선 수송수요 증가 및 신조선 투입예정에 따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권의 확대추진 상황, 비용함에 외곽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내 정온도를 개선하여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피해방지, 선박통항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항 정온도 개선사업 추진 등을 안내하며 신조선 투입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각 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에서는 물품, 용역, 공사 등 접 분야의 입찰에 고용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조달기업에 대한 고용 근로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가 강화된 내용을 설명, 각 기관이 고용 및 노동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속 추진 협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산업현장교수가 학교, 직

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기업에 자문하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제도, 한국무역협회의 2017년 제20회 전북 수출 및 투자 유공인의 날 행사(12.12) 소개 등 각 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최근에 발생한 군산 조선소 가동중단, 넥솔론 파산 위기, 한국 GM철수설 등 우리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노력과 함께 더불어 전북 자존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한 원탁회의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공무원, 위법지시 거부 가능해진다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사상 불이익시 구제

정부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상관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해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명백한 위법 지시·명령에 대해 이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행 거부에 따른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과 고충심사 등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인사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청심사가 절차도 강화한다. 재심사의 경우 각 부처의 보통징계위원회가 관할해왔으나,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재심사를 관할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직 내 차별적 요소 개선 차원에서 성별·종교·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을 신설했다.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제도 또한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해 위법한 지시를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해롭다”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부처 장관, 특수활동비 점검해달라”

이낙연 총리 ‘객관의 눈’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14일 각 부처 장관에게 특수활동비 집행 관행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특수활동비가 이번 예결위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국정원 내부 개혁은 그것대로 해나가고, 국회가 입법으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부처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 관행만 너무 따르지 말고 반성적 점검을 장관들이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이번 예산안을 내면서 전체 특수활동비 금액을 줄였고, 일



부는 기관운영비로 도리며 정상화 노력을 했지만, 아직 국민께 설명하기 쉽지 않은 관행이 남아있지 않나 본다”며 “부처마다 냉정하게 객관의 눈으로 시정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국내 일각의 우려를 잠재울 만큼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이제 FTA(자유무역협정)가 돌아올 순서”라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통상교섭본부에는 민간의 준비를 갖추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ASEAN+3 기념촬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ASEAN+3 정상회담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 주범 영농폐기물 재활용합시다” | 도, 12월까지 집중 수거기간 운영 지난해 대비 예산 56% 증액 지원

전북도는 깨끗한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거보상금 인상 및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등 영농폐기물 수거사업비로 28억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투입 증가율 56%로 증액 지원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수거된

폐비닐·농약빈병 등을 마을단위 거점별 임시 수집장소인 공동집하장에 모아두면 수거차량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옮겨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

올해는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수거단가를 인상, 수거보상금을 현실화, 공동집하장을 확충, 수거기반 조성과 마을별 집중수거추진단 운영으로 주민자율 참여를 유도, 인식개선 홍보 등 수거체계를 강화했다.

수거보상금 인상에 따라 폐비닐은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1kg에

100원으로 인상, 수거등급제 정착으로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 하고 있다.

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공동집하장을 대거 확충, 158개소를 확보, 1개소당 5백만원 지원으로 올해 65개소를 설치했다.

또한, 마을주민 및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집중수거추진단 활동으로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11~12월)을 지정 운영하여 수거율을 높인다.

지난해 영농폐기물 추진실적은 폐비닐 1만8,813톤과 농약용기 581만개 수거, 수거보상금 16억원을 지급, 공동집하장 34개 완공했다. 올해는 9월말기준 폐비닐 1만7,147톤과 농약용기 577만개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신현승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점차적으로 공동집하장 시설을 확충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北, 귀순병사에 40여발 발포 확인

북한군이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관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거쳐 귀순하는 것을 막기 위해 40여발을 발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군 하급 전사(병사)의 귀순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을 캐묻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향후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발음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북한군) 4명이서 40발 정도를 쏘았다. 각자 10발 내외이기 때문에 순간적이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JSA에서 사

격이 이뤄졌는데 군은 대응태세만 유지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북한 군끼리 사격을 했다”며 “현장 초소에서 3명이 근무하는데 순간적인 일이라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북한군의 사격으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이 피탄됐다고 보고했다.

송 장관은 “북한군이 40여발을 발사했는데 발사한 총탄이 피탄된 지역이 우리 쪽인가라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 피탄된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맞다”고 말했다.

/뉴시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최영민(1965. 1. 30.생 2017. 5. 19.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장인해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체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년929 상속한정승인 판사 장인해
▶ 피상속인: 망 최영민(1965. 1. 30.생 2017. 5. 19.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 407동 1302호(효자동 2가, 휴먼시아 아이린)
▶ 공고인: 최영삼
▶ 한정승인수리일: 2017. 8. 14.
▶ 공고기간: 2017. 11. 15. ~ 2018. 1. 14.
▶ 연락처: (의뢰인 김준영 법무사의 주소)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 9 스카이블루빌 101호(덕진동 1가) 한울법무사 사무소 010-3703-781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